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회계 감사를 통해 본 잘못된 업무처리 사례

2021. 1월

감사위원회



경상남도 GYEONGNAM

목 차

I . 예산 분야	1
1. 00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부적정	2
2.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출연금 집행 부적정	3
3.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소홀	4
4. 포상금 등 예산편성 부적정	5
5. 직원 MT행사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6
6. 임의 협의체 부담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7
7. 00축제 추진 부적정	8
8. 00행사 민간행사보조금 추진 부적정	9
9. 00사업 민간위탁금 지원 부적정	10
10. 예산편성지침 수립 부적정	11
11.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	12
II . 수입 분야	13
1. 취득세 부과업무 소홀	14
2. 재산세 부과 누락	15
3.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누락	16
4. 취득세 감면요건 위반에 대한 추정 누락	17
5.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18
6.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 부과 소홀	19
7. 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적정	20
8. 세입세출외현금(예수금) 관리 부적정	21
9. 관공선(행정선) 검사 수수료 지원신청 누락	22

Ⅲ. 지출 분야 23

[공사계약]

1. 00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24
2. 00소하천 사업추진 부적정 25
3. 00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26
4.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27
5. 분할발주 계약 추진 부적정 28
6. 00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29
7.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등 계약 추진 부적정 30
8. 지연배상금 부과업무 소홀 31

[수의계약]

1. 특정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및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발주 .. 34
2. 특정업체 외에는 응찰할 수 없는 과도한 요건으로 입찰 ... 35
3. 특정업체와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36
4. 00사업 묘목 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37
5. 1인 견적에 의한 학술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38

[물품계약]

1. 검사연구장비 분할구입 부적정 40
2. 해양쓰레기 수거소모품 분할구입 부적정 41
3. 공용차량 임차 분할발주 및 자체계약 부적정 42
4. 전산장비(컴퓨터, 모니터) 구매 부적정 43
5.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 절차 부적정 44
6. 경로당공기청정기 구매계약 부적정 45
7. 디지털항공사진 구매계약 부적정 46
8. 방문기념품 구입 및 관리 소홀 47
9. 물품구매 단가계약 체결 미이행 48

〔 지출일반 〕

1.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소홀	50
2. 하자검사 미실시	51
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미이행	52
4. 국내여비(식비) 및 급식비 중복 지급	53
5. 신용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54
6. 현금영수증카드 등록·발급 누락, 사용대장 미작성	55
7.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설정 소홀	56
8. 입장료 할인 규정 미비 및 초대권 관리 소홀	57
9.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물품 및 일반직원 피복 구입)	58
10.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계약 체결	59

IV. 공유재산 및 물품 분야

1. 00재단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부적정	62
2. 00승마장 민간위탁 추진 부적정	64
3. 권역별 농촌개발사업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	66
4. 신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미이행	67
5. 공유재산 매각 업무처리 부적정	68
6. 00체험생활관 등 관리위탁 업무 처리 소홀	69
7.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등 관리 소홀	70
8. 공유재산 사용허가자 보험공제 부과 소홀	71
9. 행정재산 대부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72
10. 재물조사 업무처리 소홀	73
11.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정수물품 구입	74
12. 불용물품 처분절차 부적정	75
13.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부적정(일괄 폐기 등록)	76
14. 미술품 관리 소홀	77

V. 보조금 분야 79

[농림·축산]

1. 지원요건 미충족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적정 80
2.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부적정 81
3.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부적정 및 공사대금 편취 82
4. 콧감단지조성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 83
5. ○가공·유통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84

[사회복지]

1. 허위공문서 작성 등 회계질서 문란 86
2.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 87
3. ○시설 후원금 관리 지도·감독 소홀 88
4.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정관변경 검토 등 소홀 89

[교 통]

1. ○택시 운행 및 지원금 지급 부적정 92
2.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집행 부적정 93
3.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원가산정 및 재정지원 부적정 94
4. 차량 폐차매각대금 등 수입금 누락 95

[신재생에너지]

1.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98
2.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부적정 99
3.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100
4. 태양광 발전 사업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101

[문화·체육]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 104
2. 제○회 전국고등학교 □대회 추진 부적정 105
3. □체육대회 개최 지원 보조사업 정산소홀 106
4. 0보조금 집행에 따른 세금신고 지도감독 소홀 107

I . 예산 분야

-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과 부칙(2014. 5. 28. 개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며,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군 교육발전위원회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백만원의 출연금을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편성 집행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2 위반 및 부적절한 재정 운영을 하였음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지자체 재원 지원 가능한 대상 파악, 이행절차 확인 후 예산 편성, 집행
 - 법령 등 지원 근거 명확하고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등)으로 의회 승인 절차 이행

※ 사단법인, 개인, 개인단체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액은 그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의 합계액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에 미달 되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함에도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로 보조금 △△△백만원을 집행함
 - 출연금으로 (사)○○장학회에 출연하고 다시 ●●교육청 등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사업비 △△△백만원을 교부하여 결과적으로 □□군에서 (사)○○장학회를 통해 편법으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함
- ⇒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지자체 재원으로 교육경비 지원가능 여부 파악
 -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 불가

-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은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은 예산편성 전까지 자체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연례 반복적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행사성 경비는 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신규투자사업인 ■■특화사업 40억원, 행사성 사업인 ○○축제사업 2억원을 재정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함
- ⇒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사업비 기준에 따라 재정투자 심사 이행 여부 확인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행사성 사업 등은 시군에서 자체 투자심사를 이행

① 포상금 예산편성 부적정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제2항에 따르면 포상금 비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되어 있다.

②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부적정

-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포상금 및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 시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포상금 총 △△△백만원을 부적정하게 편성함
 - ■■■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사업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집행함
-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포상금,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시 법령이나 조례 근거하여 편성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고 계좌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운영비 중 일·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현금 취급 제한 예외를 두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매년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 한 후 각 부서별로 직원 MT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 1명당 (가족 1명 포함) △△천원을 현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함
-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관련법령에서 정한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집행 불가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에만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법」제165조에 따라 설치된 전국적 협의체, 개별 법령으로 부담금 지원 근거가 명시된 협회에만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단체 또는 기관별 업무협조를 위하여 구성된 조직이나 법인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당 조직이나 법인에 회비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협의회가 아닌 □□협의체와 개별단체에 법령의 근거 없이 연회비 명목으로 △△백만원을 부담금으로 집행함

⇒ 현지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단체 또는 기관별 업무협조를 위하여 구성된 조직이나 법인의 경우 부담금 집행 불가

① 주관 축제·행사에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부적정

-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수익금(입점료, 기부금)에 대한 집행 및 정산 소홀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집행잔액, 예·결산이자는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③ 1인 수의계약 체결로 예산낭비 초래

- ◆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에 교부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포함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편법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보조사업자는 수입금 중 총 △△백만원을 군수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고,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등 △△△천원을 반환하지 않음
- 또한 □□행사장 설치·임차용역 계약을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
⇒ 업무담당자 경징계·훈계, 수입금 반환 및 시정 조치함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직접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직접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계약 철저

-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고 자본적 경비의 집행은 할 수 없다.
- ◆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지출원인행위)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재무관”)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읍·면에 ○○행사를 위한 예산을 읍·면에 지원하기 위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 보조사업자로 (사)□□군지회를 정당하게 선정하고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하지 않고, 읍·면에 재배정하여 관내 개별 단체에 지급하여 보조금을 집행함
-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 및 심의를 거쳤다면 정당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을 하도록 주의

① 민간위탁금(주차장, 환경정비 인건비) 지급 부적정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민간위탁금(주차장 임차비) 지급 부적정

- ◆ 「농지법」제36조에 따르면 농지를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주(主)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등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수입금이 발생이 되므로 정산을 받아 위탁료를 산정하여 부족분에 대해 민간위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수입금을 반영한 위탁료 산정없이 주차관리 인건비 등 전액을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부적정하게 지원함
- ◎◎번영회가 개인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4년 동안 약 △△△백만원의 주차장 임차료를 민간위탁금로 지급함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수입금이 발생이 되는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료 산정 적정여부,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농지법」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여부 검토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예산편성 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따라서, ○○재단에서는 예산편성지침 수립 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통보받은 예산 편성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예산의 편성·집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 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예산 과목을 만들어 예산 편성 지침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임의로 만든 예산 과목을 활용하여 매년 예산서를 작성함

⇒ 현지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수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 ◆ 「지방재정법」제36조 및 제4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 ◆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예산은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과에서는 정책사업 내 전용을 넘어 타 부서(◆◆과) 예산을 전용 요청하였고 예산관리 및 예산전용을 심의하는 ■■과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예산전용을 승인함
- 한번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이 불가함에도 2차 전용을 승인하여 예산 전용제한 규정을 위반함
-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예산의 전용 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전용하여야 함

Ⅱ. 수입 분야

- ◆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농지 3%, 농지 외 4%, 농지 상속 2.3%, 농지 외 상속 2.8% 등 부동산의 종류, 취득원인 등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과세 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농지 외(4%) 부동산 △건에 대하여 농지 세율(3%)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부과하였으며, 무상으로 취득(증여)한 부동산을 유상거래 세율(1%)을 적용하여 잘못 부과하는 등 지방세 과세업무를 소홀히 함

⇒ 취득세 △△△백만원 추징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취득세 신고 시 토지가액 증가분에 대한 누락 및 세율, 과표 과소 신고분에 대한 세원을 확인하여 누락세원 발굴

① 농지·산지 전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소 부과

- ◆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르면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은 5,000만원 이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무허가 건축물 등 부과 누락

- ◆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부과함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지목이 전인 토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분리과세로 부과하는 등 재산세 농지·산지 전용 토지에 대하여 과소 부과함
- 2015년 이후 불법 축사를 신축하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황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누락함
 - ⇒ 재산세 △△△천원 추징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

- ◆ 「지방세법」제143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 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라고 되어 있다.
- ◆ 「경상남도 도세 조례」제13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하수 허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확인한 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음
- ⇒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천원 추징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부서(허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부과 조치

① 자경농민 감면조건 위반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차량 감면위반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서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먼저 감면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감면 받은 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방치함
- 장애인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취득인이 감면 유예 기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이전하였음에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방치함

⇒ 취득세 △△△천원 추징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취득세 감면(자경농지,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내에 소유권이전, 임대, 주소이전 등 감면조건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

- ◆ 「지방세법」제23조, 제24조, 제35조에는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 인허가 부서에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면허 증서를 발급하여 총 △△△건의 등록면허세 부과가 누락됨
⇒ 등록면허세 △△△천원 추징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각종 면허 부과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면허를 부여 하여야함
 - 허가부서에 면허자료를 확인하여 등록면허세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 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 군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催告) 하여야 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해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을 부과하여 과태료 상한은 4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 지적내용

- ●●군에서는 2016년 ~ 2017년 사이에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24건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상한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무려 25개월이 지났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천원 추징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 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 ◆ 「지방세징수법」제15조에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터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주)○○개발의 폐업에 따른 취득세 체납액 △△백만원에 대해 과점주주인 ◎◎◎에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고지하여 부과하지 않고 방치함
- ⇒ 취득세 체납액 △△백만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법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 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과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5조 및 제77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세입 처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도록 되어 있다.

□ 지적내용

- ○○재단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면서 보관기관, 보관사유 등을 검토하여 세입처리하거나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부내역 작성 없이 계속해서 이월하여 보관함
-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세입세출외현금은 회계연도 종료 시 미반환금의 반환시기 경과여부 및 미반환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고,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세입조치 하여야 함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제2조 및 「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 지원규칙」제3조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관공선의 의무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검사비 지원대상은 지방관공선 중 검사일 이전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에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한 선박이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검사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방관공선으로, 관련법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같은 규칙 제5조의 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 신청서, 선박검사증서, 검사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소에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천원), 제1종 중간검사 수수료(△△천원)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검사비 지원대상이 됨에도 지원신청을 누락함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재산 관리 시 보험, 공제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중요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Ⅲ. 지출 분야

[공사·용역 계약]

① 분할계약 사업추진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② 현장 품질관리 소홀

-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위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초급 품질관리대상공사의 경우 초급기술인 1명이상과 시험실 규모를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공사의 전체 사업물량에 대해 통합발주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용역과 공사를 각각 3건으로 분할 발주하였으며, 시공사가 3개 업체로 구간별로 나누어져 하자관리를 용이하지 않게 함
-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으로 발주 전 품질관리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계상하지 않고, 20㎡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음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공사와 용역의 통합 발주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현장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6절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사유는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한다.
- ◆ 「소하천 정비법」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중기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공사 구간으로부터 설계변경 대상이 되지 않는 약 300m정도 떨어져 있는 구간에 제방(공사비 △△백만원 증액)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함
- ■■공사는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교량 설치와 해당 공사와 관계없는 공사구간 밖의 농로를 포장하는 공사까지 포함 (공사비 △△백만원 증액)하여 설계변경을 승인함
-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해당 공사와 구분되는 별도 공사를 설계변경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6절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사유는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한다.

※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공사의 시공 중에 발생하거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당초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의 변경을 말하고, 추가로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함

□ 지적내용

- ○○시에서는 □□천 하류부에 공사구간과 약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 하천정비공사를 추가로 계획하면서 신규 공사로 발주하지 않고, 총 4차 설계변경(총 공사비 △△△백만원 증액)을 통해 시공사에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사업비를 증액해 주는 결과를 초래함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공사구간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추가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시행 중인 공사와 별도로 신규 발주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절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부군수와 소속 공무원(□□과장)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호선하지 않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함
-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 준수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 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 발주 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사후관리 용역(△△개소)을 추진하며, 통합 발주할 경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부실 용역이 우려된다는 사유만으로 △개 지구로 분할하여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단일 사업 예산을 분할하여 발주하지 않도록 하고 주의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 처리기준」 제3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 예산이 1억 원(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같은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 예산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 발주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LED경관조명기구의 세부품명번호가 동일하고 물품 구매 시기가 같음에도 분할하여 납품을 의뢰하여 계약가격의 10%(최대할인율)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을 받지 못함
-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단일 사업 예산으로 관급자재를 구매 시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하고, 별도 규정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외에는 동일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지역제한, 설비제한, 중소기업자 등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님에도,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제한과 더불어 최근 3년 이내 ■■■재활용 처리실적이 단일 건으로 6,000㎡ 이상인 업체(동일실적),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자)로 과도하게 제한함
- ○○시에서는 □□용역 입찰 공고 시 경상남도 소재 업체(지역제한), 최근 3년 이내에 한지형 잔디를 1년 이상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동일실적), 관리장비를 보유한 업체(설비제한)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함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별도 규정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외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2개 항목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지연배상금은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기성 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성 부분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공사의 계약지연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기성 부분의 검사를 거쳐 완성 부분에 대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부당하게 부과함
-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지연배상금 부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지연의 책임 여부,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Ⅲ. 지출 분야

[수의계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고,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사종류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숲가꾸기 사업, 풀베기사업사업 등, 총 △△건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로 분할하여 ■■ 조합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
- ⇒ 업무담당자 경징계 및 책임자 경징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단일 사업 예산을 분할하여 발주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추진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1절의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제한 등을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주요시책·행사 소식에 대한 □□뉴스 제작·방영 용역을 추진하면서 입찰 공고서상의 입찰 참가자격으로,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지상파 또는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로 허가를 필한 업체로 경남지역 최소5개 이상 지자체에 지상파 또는 케이블 TV에 방영 가능한 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실상 (주)■■■ 방송만이 입찰 참가를 가능하게 함

⇒ 업무담당자 경징계,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필요한 기술자격에 대해서만 입찰 제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고,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는 본청의 회계공무원으로서 재무관은 행정국장으로 분임재무관은 회계과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재)□□방송과 다큐멘터리 제작 용역계약을 하면서 해당 방송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유만으로 일반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분임재무관(회계과장)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당 사업부서인 ■■■과에서 계약을 체결함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1인 전적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추진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주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묘목 구입과 관련하여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다른 법령에서 명시하여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묘목 구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고 후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여야 한다.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 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림사업에 필요한 유량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묘목 대행생산 방식’의 근거에 불과하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묘목 대행생산자를 명시한 조항이 아님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조림사업용 묘목 대행생산을 위해 공모에 선정된 □□협회에서 묘목을 일괄 구입하고 있다는 점을 사유만으로 □□협회에 가입된 특정인을 지명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1인 전적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추진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제1항에 따르면 특정인과의 1인 견적에 따른 학술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학술연구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그 “특정인” 하나뿐인 경우와 다른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 지적내용

- ○○시 사업부서에서는 수행경험이 있고 공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과업수행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수의 계약을 계약부서에 의뢰하였고, 계약부서에서는 해당 연구용역이 경쟁이 불가능하고 특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1인 견적수의계약을 체결함
- ○○시에서는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단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1인 견적수의계약을 체결함
 -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1인 견적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추진

Ⅲ. 지출 분야

[물품계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원 사업부서에서는 단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위 내의 물품인지, 통합하여 발주가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개별 검사·연구장비를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계약부서에서는 시정 요구 없이 그대로 계약을 체결함
-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단일 사업 예산으로 물품 구매 시 품목별,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사종류별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 소모품(어망)을 구입하면서 시기적으로 분할(15년 △회, 16년 △회, 17년 △회)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함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단일 사업 예산으로 물품 구매 시 품목별,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수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II-1-2'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항목에서는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확대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사에서는 수요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각 공사현장 감독용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본사에서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은 충분히 통합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차량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각종 계약 시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 처리기준」 제3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 예산이 1억 원(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같은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 예산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 처리기준」 제3조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는 데스크톱컴퓨터 및 일체형컴퓨터이며, 모니터는 개인용 컴퓨터와 통합되어 단일 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 이뤄지는 제품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매년 구매 예산이 1억원 이상으로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인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를 시기적 · 품목별로 분할하여 2단계경쟁을 회피함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컴퓨터와 모니터는 통합하여 단일 건으로 발주하되, 구매 예산이 1억원 이상이면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 처리기준」 제3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 예산이 1억 원(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같은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 예산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구매하면서 연간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시기적으로 분할 발주하여 2단계경쟁을 회피함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기준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2단계 경쟁을 거쳐서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물품과 유지보수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면서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입찰가격과 경영상태가 주 평가요소인 물품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또한 유지관리 용역기한(3년)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물품 납품 시 유지보수 비용 전액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계약이행능력,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명확히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용역 대금 지급 시 최종 완료 여부를 확인·검수 후 대금 지급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 계산에 따른 가격, 표준 시장단가,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기술용역 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목적물별 계약방법으로 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으로 분류되며, 계약방법 선택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 등 관련 절차가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전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항공사진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유사한 사업과 거래실례가격 비교·검토 없이 업체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약 △△△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 또한 항공촬영에 대한 기술용역 계약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물품구매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공간정보 DB구축 서비스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업체, 측량업(항공촬영업, 영상처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특정기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만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함
-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구매계약에 앞서 거래실례가격, 표준 시장단가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발주 시 기술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로 소모성 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면 아니 된다.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조문별 해설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으로 시책 또는 지역 홍보를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이나 공동행사, 회의,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의 구입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함

□ 지적내용

- ○○시에서는 업무추진비 지출대상인 기념품(자매도시 초청방문객 및 내방객 제공)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였으며, 기념품 지급일시, 대상자, 수량을 기재하는 기념품 관리 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배부함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사무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비목에서 업무추진비성 성격의 경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33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 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 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시에서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월 분할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하여 예산을 낭비함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일정 기간동안 계속하여 같은 물품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동일 예산으로 기준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

Ⅲ. 지출 분야

〔지출일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검수일로부터 1년 이상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물품 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니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보관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원에서는 물품구매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하자담보이행각서만 징구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지 않음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니면 하자보수보증금(증권)을 징수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동안 보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라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소에서는 준공된 공사 △△건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또는 최종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총 △건의 공사는 책임기간 만료 전까지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그 결과 최종검사 없이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수책임이 해제되도록 방치함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책임 부과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 같은 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 포기 사유에 대한 정당 여부를 판단하여 부정당업자로 판단될 경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물품 구입을 위해 기초금액 5,600만원으로 입찰공고 후 1순위로 낙찰된 (주)□□회사가 입찰가 산정 오류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납품을 포기서하였음에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아니 함
- ○○시에서는 용역을 위해 4,360만원으로 입찰공고 후 낙찰된 (주)□□회사가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유선으로 통지하자 계약 체결 기한까지 계약 체결 포기서 제출을 촉구한 후 재입찰을 추진함
- ○○시에서는 수의계약 배제 시작일이 7일이 지난 후 공문을 시행하여 제한대상 업체가 배제기간 중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납품)을 포기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행

- ◆ 「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별표2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에게 일비·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5에 따르면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 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급식단가를 8,000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관에서는 관외 출장자에 대한 국내여비(식비)를 20천원을 지급하고도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1식, 8천원을 지급하여 총 △건, △△△천원을 중복 지급함
-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국내여비 및 급량비의 지급 시 상호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국내여비(식비)와 급량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IV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지출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 전까지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 재무관까지 보고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발급(해지)시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지출원에게 통보(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 또한 카드 분실 시 해당카드사에 신속히 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면 전·후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 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보고하지 않았으며, 대금 청구일 전에 지출을 하지 않아 이용대금을 연체함
- 신용카드를 분실하고도 신용카드 발급대장에는 폐기한 것으로 기재하고 해당카드사에 분실 신고하지 않았으며, 보관책임자 교체 시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하지 않음
-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카드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하고 신용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보관책임자 변경 시 인계인수를 서면으로 하여 카드 사용내역, 분실·보관 책임을 명확히 함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IV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용카드를 현금 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하고 급량비 등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소에서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등록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누락되었으며,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매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보고(결재)하지 않음
 - □□소에서는 급량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고 다른 증빙서류도 없이 지급함
-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및 급량비 지급절차 준수

- ◆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 ◆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을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이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회계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한 대리자, 분임자 또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소에서는 실제 회계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의 직위 수는 8명임에도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물품사용 공무원에 준하여 볼 수 없는 직원 △명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재정보증대상을 설정함
 - □□소에서는 회계관직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 대해 재정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였음
-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재정보증 설정 시정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재정보증 설정 시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 「지방회계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세외수입 등 포함)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 규칙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 ◆ 따라서, 기획공연 및 전시에 따른 입장료 징수·할인 시에는 법령에 관련 근거가 없으면 조례 및 규칙에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무료입장권인 초대권도 각 공연 기본계획수립 시 공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초대권 발권대상자를 선정하고 검인대장에 등재 후 초대권발부 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 지적내용

- □□관에서는 2018~2019년까지 총 △△의 기획공연·전시행사 개최 하면서 입장료 결정, 할인, 무료권 발권 및 배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입장료를 결정하여 징수하였음
 - 또한 ○○청 및 ○○업체 등에 대해 협약체결을 이유로 할인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판매하였으며, 라디오 협찬, 홍보처 기관 및 단체 등에 무료초대권을 배부하였음에도 검인하지 않고 배부대장 또한 작성하지 않음
-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개선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기획공연·전시행사 개최 시 입장료, 할인대상, 초대권 배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재산취득 및 공사취득에 따른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및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한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공사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 연수, 구매의 타당성(공사현장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며,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고 고가의 등산용품 등의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지역특산품, 전산 소모품, 업무용 프린터 등 시설부대비로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고, 현장감독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안전화, 패딩 등을 구입하여 지급함
-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시설부대비 집행 시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물품 구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감독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건 △△△백만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 △건 △△△백만원, 물품 △1건 △△△백만원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 체결 방법,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하지 않고 계약을 추진함
-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IV. 공유재산 및 물품

① 관리위탁 전대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수탁 계약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전대 시 계약절차 부적정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입찰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따른 조례 미 제정

- ◆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제139조 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 보험료(공제금)징수 소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9조제6호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시 □□재단에서는 수탁재산 중 휴게음식점 등 총 △△건의 수익재산을 전대하면서 ○○시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지 않고 전대함

- ○○시 □□재단에서는 숙박시설 등 총 △건의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체결함
- ○○시에서는 ■■문화센터 내 공연장 및 수영장 등 △개의 공공 시설 사용료를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징수함
- ○○시에서 사용·수익 허가한 ◆◆파크 외 △건의 행정재산에 대한 건물의 보험료(공제금)를 ○○시에서 납부하고도 수탁자인 □□재단에 보험금(공제금) △△백만원을 징수하지 아니함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관련 조례 제정 개선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수탁자가 수익재산을 전대하고자 할 경우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 승인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대계약을 체결 하도록 조치
- 공공시설물 이용자에 대해 사용료·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근거 규정을 제정
- 보험 및 공제 가입 대상 행정재산에 대한 부담금을 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도록 주의

① 행정재산 관리·위탁 조례 미제정

-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 시 관리능력 등 평가 미실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되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관련 규정(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보고 및 동의를 받아야 함

③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 ◆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승마장을 관리·위탁하면서 사용료를 명시하지 않고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승마장 시설관리 및 사용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승마장 이용객에게 회원요금을 징수함

-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 평가를 하여 심사결과를 의회에 보고(동의)하지 않고 재계약을 체결함
-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년 동안 승마체험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 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공공시설물 이용자에 대해 사용료·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근거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행정재산 민간위탁(재계약) 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① 농촌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례 미 제정

-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공유재산 위·수탁(사용허가) 시 절차 없이 무상허가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 할 수 있으며, 「○○군 공유재산 조례」 제22조에서는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이 5년임에도 □□권역, ■■■권역의 위탁기간을 10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 권역별 농촌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농업법인에게 위·수탁 하면서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근거 없이 무상으로 제공함
 - ○○권역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가 조속히 요구되는 실정임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
-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위·수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탁기간과 위탁비용을 정하고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
-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그 일부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174, 2010.9.8)

□ 지적내용

- ○○군에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발생한 매출부가가치세는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환급이 가능함에도 △△△천원을 환급받지 않음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시설물을 신축하고 준공 후 사용허가로 임대료 수입에 따라 납부한 매출부가가치세 중 환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

① 공유재산(일반재산) 수의매각 부적정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치되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

- ◆ 「건축법」 제20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한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가설건축물 매각 시 감정평가액인 △△△백만원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음에도 특정업체와 △△△백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특정법인에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함
 -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만료 및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함
-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공유재산 매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 같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고, 제6항에 따르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별표4>에 따라 위탁료 산정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체험생활관을 관리위탁 하면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위탁료를 산출하지 않았으며 위탁료의 유·무 내용을 관리위탁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음. 또한 위탁기간을 법에서 정한 5년으로 하지 않고 10년으로 체결함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하여 위탁의 범위, 기간, 위탁비용 등을 명확히 하여 위탁 협약서에 명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공유재산인 답(00번지)을 개인이 사용허가 없이 묘지 조성으로 무단점유(총 0명) 하고 있는데도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하지 않았으며, 변상금 △△△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음
-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시정 및 변상금 부과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공유재산 정기 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조치 철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 또한,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9조 제6호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은 사용자 부담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2017 ~ 2020년까지 관리 위탁 및 사용 허가한 행정 재산 △△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군에서 납부하였음에도 납부한 보험료 (공제금) △△△천원을 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지 않음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시정 및 납부한 보험료 회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보험 및 공제 가입 대상 행정재산에 대한 부담금을 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도록 주의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일반재산은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 ※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로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대장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일반입찰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여 특정단체에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입찰(최고입찰가) 대비 재정 손실을 초래함
-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 일반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지 않도록 주의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하고,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지침」에 따르면 휴대용 리더기를 사용할 경우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 중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훼손 등으로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태그를 재발행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 또한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되더라도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고,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지침」에 따르면 재물조사 후 조치사항으로 대장에만 존재하는 물건에 대한 손망실 처리 등 재물조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전자태그가 미 부착된 물품 00점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재발행 하였음에도 부착하지 않고 사물함에 보관하면서 물품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휴대용 리더기로 동기화하여 재물조사를 소홀히 추진함. 이로 인해 현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재물조정을 하지 못함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정기재물조사 실시 전 전자태그 미부착 된 물품을 사전에 미리 조사하여 전자태그를 재부착하여 재물조사를 정확하게 추진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르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노트북컴퓨터 등 59종이 지정되어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호에 따르면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2016년, 2017년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 정수 배정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최근 2년간 정수 배정승인 없이 냉난방기(△건 △△△천원), 노트북(△건 △△△천원) 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음
- ○○군에서는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한 정수 승인절차 없이 캠퍼코더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무정전전원장치 등 2개 정수물품을 대체 승인으로 구입 한 후 남은 물품을 불용결정 하지 않고 방치함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물품 구입 시 정수책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수물품 배정승인을 받고 취득하여야 하며, 대체취득(교환)으로 정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은 불용결정 후 정수에서 제외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 물품관리 조례」제17조에 따르면 불용 결정한 물품으로 ①매각대금이 매각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김이 없을 때, ②매수인이 없을 때, ③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 ◆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불용품을 폐기하는 경우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불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상태에 따라 불용대상 물품을 결정하고 그 처분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물품의 상태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 ※ 불용품의 처분은 1단계 매각, 보존, 재활용, 2단계 양여, 3단계 해체 또는 폐기의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불용품(컴퓨터 000대, 모니터 000대)을 처분하면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객관적인 매각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폐가전무상수거센터에 일괄 폐기 처분하여 약 △△△천원의 매각수익을 상실하게 하였음
- ⇒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불용물품 발생 시, 그 처분방법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관에 물품의 상태를 재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매각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임의 폐기 불가

- ◆ 「000 물품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르면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또한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2018년, 2020년 정기재물조사 후 해당부서에서 없어진 물품에 대해 경위서 징구, 사실 조사 등 객관적인 확인 및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 불용결정을 하지 않고 물품관리시스템에 일괄 폐기한 것으로 등록하였음
-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물품의 망실, 훼손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경위서 징구, 사실 조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함
- ※ 경위서 징구, 사실 조사, 변상 명령을 통해 물품 보관에 대한 책임성 부여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1조, 제9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IV.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기준에 따르면 미술품은 예술적, 재산적 가치의 측면을 고려하여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고 미술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은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A, B 등급으로 분류된 작품은 각 분야별로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실물감정 의뢰하여야 하고, C, D 등급 미술품은 자치단체 미술품 관리 자문위원회에 의뢰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술품 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미술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미술품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하지 않았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을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매년 미술품의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음

⇒ 업무소홀에 대해 현지주의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미술품의 가치를 등급으로 분류·관리하는 것은 보존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등급분류 기준은 가격 기준으로 A·B·C·D 등급으로 분류하며, A·B등급으로 분류된 작품에 대하여는 5년마다 실물감정(전문기관 의뢰)을 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함

V. 보조금 분야

[농림·축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해서 자금지원 등을 제한 할 수있다.
- ◆ 「재정사업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총 출자금 1억 원이상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인 조합원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농업법인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조금 △백만원을 교부하는 등 지원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시정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선정 시 선정기준 요건과 보조사업자의 자격 적합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완료 보고서와 다르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사업을 완료하였지만 정산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거나 조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약 대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월)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에 대한 시정·제재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
 - 보조사업자가 공사업체와 공모하여 보조사업자의 배우자,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인건비를 2회에 걸쳐 △△백만원을 되돌려 받았고, 이를 증명 할 객관적인 정산서류가 없음에도 정산 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해 주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시정, 보조사업자 고발 요구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정산 시 계좌거래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조사업 정산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및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에 따르면 지방보조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2항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제5항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건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인 '꽃감 건조장' 건축물을 용도와 다르게 주택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목적 외 사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시정 및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함
⇒ 업무담당자 훈계, 목적 외 사용 보조금 회수 등 시정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후관리기간 동안 시설물이 당초 계획된 사업 목적대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즉각 회수 조치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에 따르면 지방 보조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공 시설을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물과 사업장 위치를 무단으로 이전하였고, 사업 초기부터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였음에도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업무담당자 훈계, 무단이전 사업장 원상 복구 및 보조금 회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후관리기간 동안 시설물이 당초 계획된 사업 목적대로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V. 보조금 분야

[사회복지]

-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 「지방회계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로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인터넷 뱅킹, CD이체 등의 과정에서 △△△회 걸쳐 정당한 채주에게 입금한 것처럼 내부결재 문서 및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자부담계좌,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정산검사 시 적정 하다고 인정해 주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업무담당자 훈계, 보조사업자 고발, 보조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사용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보조사업 정산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반환 등 조치 이행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5조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의 “재정관리”에 따르면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행위 시에는 내부기안과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 보조부에 기록하며, 예산집행 시 내부기안을 작성하여 시설장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퇴직적립금 계좌는 매년 보조금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내부기안과 지출결의 절차 없이 종사자 퇴직적립금 공금계좌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에 걸쳐 현금출금 및 개인계좌로 이체(대체)하여 생활비 용도로 무단 인출하는 등 보조금 △백만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정산서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정산 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업무담당자 훈계, 보조사업자 행정처분 등 시정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시설의 보조금계좌 외의 퇴직적립금 계좌, 원천징수(예수금)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및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 제41조의4, 제41조의6, 제41조의7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후원금을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 또한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비지정후원금)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할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시설이 법인으로부터 비지정후원금 △△백만원을 받아 자부담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시설에서는 비지정후원금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정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는 수당(직원하계휴가비 등)을 인건비로 편성하여 지급하였음
- ⇒ 업무담당자 훈계, 보조사업자 행정처분 등 시정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외에는 사전 협의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전용계좌 사용 및 목적준수 집행여부 확인)

-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회의 안건, 의사, 출석임원성명, 표결 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안건, 출석한 임원의 성명을 기록하고 출석임원 전원이 회의록 및 회의조서 마지막 장에 날인 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 본인확인과 이사회 회의록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감사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확인 후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등에는 시장·군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제출한 수익사업 정관변경신청서를 검토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해당 법인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재원대책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법인이 수익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법인 등록 이사 8명 중 4명이 인감이 아닌 일반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감사의 기명날인이 없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함
 - ○법인이 수익사업 수행의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재원확보방안, 재산 소유 증명서류, 사업장 및 인력 확보 방안, 수익사업 집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익사업 정관변경을 인가하였음
-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정관 변경을 검토할 경우 수익사업 조건들을 충족하였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

V. 보조금 분야

〔교 통〕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택시 운행 조례」에 따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사업의 휴지 등의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처분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날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0택시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이 해당 마을 쿠폰을 받아 이용한 택시이용료, 운행시간 종료 후 운행한 택시이용료, 동일시간대에 운행한 영수증으로 중복 청구한 이용료 △백만원을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 또한 0택시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운전 적성 정밀검사(특별검사) 미수검 기간에 택시를 운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택시운영 보조금 △백만 원과 유가보조금 △백만 원 상당액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음

⇒ 업무담당자 훈계, 부적정 지급액 회수 등 시정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택시보조금 지급 시 탑승대상 여부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와 영수증의 승·하차 시간 등 운행 적정성 여부 확인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운송업체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건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었지만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면서 운송업체에서 보조금으로 축의금, 범칙금 등 목적 외로 △백만원을 집행하였음에도 계좌거래내역, 자금흐름 등을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정산검사를 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 ⇒ 업무담당자 훈계, 부적정 지급액 회수 등 시정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증빙서류 없이 개인용으로 지출, 증빙서류와 다른 지출을 하지 않도록 매 분기별 정산 업무와 지도·감독 철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액 등에 대해서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으며,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를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2017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용역을 실시하면서, 용역 업체가 버스운송과 직접 관련 없는 임원 회식 비용, 임원차량 유지비 등 △△백만원을 원가에 반영하여, 과다 계상하였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재정지원금 △백만 원을 과다 지급함
 -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법인에서 관리하는 주계좌로 일괄 인출(이체)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지만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함
- ⇒ 업무담당자 훈계, 부적정 지급액 회수 등 시정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버스재정지원금 원가산정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사 철저,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 시 보조금 관련법령과 지침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고 되어있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운송업체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내구연한(9년)경과 차량 11대를 폐차매각하면서 발생한 매각대금 △△백만원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미반환액 회수 및 차년도 운송원가 산정 시 반영 등 시정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을 통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에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명시하거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하게 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V. 보조금 분야

[신재생에너지]

-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예외사유

- ①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② 국고보조사업(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④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적내용

- ○○군에서는 2019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기간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없이, 읍·면 수요조사를 통하여 000등 △△명을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음
 - ○○○등 △△명은 미니태양광 시공업체(000)가 임의로 선정한 대상자인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후 대상자를 모집·선정

- ◆ 「2018~2019년 경상남도 경로당 태양광보급사업 추진계획」, 「2018~2019년 ○○○경로당 태양광보급사업 추진계획」, 에 따르면, 음영구간, 건축물 노후, 증·개축·이전 예정 건축물, 가설건축물 경로당은 지원이 제외되며, 보조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로 경로당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자(시공업체)의 현장 확인으로 시공이 가능한 경로당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설치 불가 시 불가사유를 해소한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2018~2019년 태양광 보급사업 대상 ○○경로당 등 △개소에서 보조사업 변경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신청 시 설치 예정지번이 아닌 다른 지번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하였음
 - 특히 ○○경로당에서 실제로 태양광을 설치한 지번 건물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고 경로당 신고필증이 없는 소유자 및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 ⇒ 업무담당자 훈계, 경로당 등기부등본 등재 및 건축물대장 생성 등 시정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신청요건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보조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지도·감독 철저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양도 하거나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이전·처분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처분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후관리기간(5년) 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0개소 △△백만원에 대하여 무단으로 매매하였으나,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 부당하게 임의처분 한 보조금 회수 등 시정 요구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후관리 철저
 - 별도 승인 없이 임의 처분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에 따르면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경우에 발전 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제4조제1항 등에 따르면 분산형전원을 계통에 연계하고자 할 경우, 설비의 안전, 전력공급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제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연계가능 용량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태양광발전소 등 △△개소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태양광 설치 지역에 대한 연계가능 용량 등 기술검토 결과를 회신 받지 않았음에도 기술적인 제반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허가하였음
⇒ 업무담당자 훈계, 소속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의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태양광 발전(전기)사업허가 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문서로 회신한 기술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전기사업 허가 유무를 결정

V. 보조금 분야

[문화·체육]

-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시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 미리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O배 대회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에 대한 공모계획 여부도 없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해 왔음
 - 공모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공모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심의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 단체(○○시 O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의 훼손하였음
- ⇒ 업무담당자 훈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등 개선 요구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은 사전에 세부사업별 산출내역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공모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등 보조사업 정산검사 및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회 전국고등학교 □대회를 추진하면서 각종 격려금 현금지급, 사업 종료 후 시상식 개최 등 총 △△백만원을 목적 외로 집행하고 관련 증빙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보조사업 집행잔액 △백만원을 □대회 종료 후 약 20개월 동안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지만 해당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정산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음
 - ⇒ 업무담당자 훈계, 보조사업자 수사 의뢰 등 시정 요구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 수행사항점검을 철저히 하고, 정산검사 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적합성 여부 확인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군에서는 ○군체육회가 '□체육대회 개최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사업내용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참가선수 격려 상품권 △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지급관리 대장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 보조사업이 종료 된 후, 체육부장 회의식대 및 대표 회의식대 등 △백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음에도 환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함
⇒ 업무담당자 훈계, 목적 외 사용액 환수 등 시정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가 기부금, 시상금 등 현금성 경비를 사업계획 예산에 포함 시 필요 시에 한해 편성하되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도록 하여야 함
※ 계좌지급 원칙, 상품권·시상품 등은 지급관리 대장 작성 필수

-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법인, 각급 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시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사업자(O체육회 등 3개소)가 선수단·임원 단복을 구입 하면서 일반과세자인 계약업체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탈루한 결과를 초래함
- ⇒ 부가가치세 국세청 신고 등 시정 조치

□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매출 세금계산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발 행 일 : 2021. 1. 29.

발 행 처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본 사례집 전문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